국민동의청원제도개선시민사회TF

(4.16연대·민주노총·참여연대·차별금지법제정연대)

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·사회부

발 신 국민동의청원제도개선시민사회**TF** [담당 : 4.16연대 이영란 사업국장 (02-2285-0416),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민선영 간사 (02-725-7104)]

제 목 [보도협조]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개최

날 짜 2021. 7. 5. (총 2 쪽)

보도협조

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개최

일시: 2021. 7. 6. (화) 10:00 온라인 생중계

1. 취지와 목적

- '국회 국민동의청원' 제도가 시행된 지 약 1년 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. 국민동의청원 시행 후 약 1년 반 동안의 현황과 실제 청원 사례를 살펴보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 개선 과제를 모색해보고자 <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>를 마련했습니다. 본 토론회는 오는 7월 6일 (화) 오전 10시,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진행되며, 국회의원 박주민·고영인·김용민·양경숙·장경태·조오섭·최혜영 의원, 국민동의청원제도개선시민사회TF (4.16연대·민주노총·참여연대· 차별금지법제정연대)가 공동주최합니다.
- 전자청원제도인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의 청원권 보장을 더욱 실질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. 지난 1년 반 동안 25건의 국민동의청원이 성립됐고, 약 3,000건의 청원안이 제출되는 등 시민의 관심이 높습니다. 그러나 '30일 내 10만 명 동의'라는 청원 성립의 문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, 청원 절차 중 소외되는 디지털 약자계층의 문제, 국회의 무기한 무심사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청원권의 실질적 보장은 여전히 갈 길이 먼 실정입니다. 이에 시민사회는 그간의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도 사례를 공유하고 국민동의청원 제도의 개선책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.

이번 시민사회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합니다.
 또한 문자통역(쉐어타이핑)과 수어통역이 동시 제공됩니다.

2. 개요

-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
- 일시: 2021. 7. 6. (화) 10:00 ~ 12:00
- 온라인 생중계 (<u>오마이TV(클릭)</u>, <u>박주민TV(클릭)</u>, <u>고영인TV(클릭)</u>, <u>장경태TV(클릭)</u>)
- 공동주최: 국회의원 박주민·고영인·김용민·양경숙·장경태·조오섭·최혜영 의원, 국민동의청원제도개선시민사회TF (4.16연대·민주노총·참여연대· 차별금지법제정연대)
- 프로그램
 - 사회: 이태호 / 4.16연대 집행위원장
 - 1부 국민동의청원 1년, 현황과 사례
 - 발제: 국회 국민동의 청원제도 운영현황 전진영 /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
 - 사례①: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 장예정 /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
 - 사례②: 10만 동의청원제도, 심의절차 문제와 해결방안 이정희 / 민주노총 정책실장
 - 사례③: 모두가 어렵지 않게 참여할 수 있는 국회 청원제도여야 이영란
 4.16연대 사업국장
 - 2부 국민동의청원 활성화를 위한 과제
 - 발표①: 국민동의청원의 쟁점과 과제 손우정 /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
 - 발표②: 국민동의청원과 국회의 국민공론장 비전과 전략 권오현 / 사회적협동조합 빠띠(Parti) 대표
 - 발표③: 국민동의청원 도입에 따른 변화와 개선과제 서복경 / 참여연대
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
- 문의: 4.16연대 이영란 사업국장 (02-2285-0416),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(02-725-7104)
- 3.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. 끝.
- ▣ 붙임자료 :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웹자보

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

일시 | 2021. 7. 6. (화) 10:00-12:00 중계 | 오마이TV, 박주민TV 고영인TV, 장경대TV

*문자통역(쉐어타이핑)과 수어통역이 제공됩니다.



사회 | 이태호 4.16연대 집행위원장

1부 국민동의청원 1년 반, 현황과 사례

/ 국회 전자청원 현황 -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/ 사례 ①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 -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/ 사례 ② 10만 동의청원제도, 심의절차 문제와 해결방안 -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/ 사례 ③ 세월호참사 관련 박근혜 전대통령 기록물 공개결의에 관한 청원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- 이영란 4.16연대 사업국장

2부 국민동의청원 활성화를 위한 과제

/ 국민동의청원의 쟁점과 과제 - 손우정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/ 국민동의청원에 기반한 국민공론장으로 발전 전략 - 권오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(Parti) 대표 / 국민동의청원 도입에 따른 변화와 개선과제 -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

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

박주민·고영인·김용민·양경숙·장경태·조오섭·최혜영 의원 국민동의청원제도개선시민사회TF (4.16연대·민주노총·참여연대·차별금지법제정연대)